

현안과 과제

■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목 차

■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특징	2
3. 시사점	8
< 보론.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 >	6
< 참고 1.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9
< 참고 2.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세 현황 >	10
< 참고 3.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세 현황 >	1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통일연구센터 : 이 용 화 연 구 위 원 (2072-6222, yhlee@hri.co.kr)

 이 해 정 연 구 위 원 (2072-6226,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약 >

■ 개요

1995년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올해로 23주년을 맞았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상호 이해도 증진 및 바람직한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추이와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특징

(정부별 특징)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3조 2,871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정권 교체 등에 따른 대북 정책 변화로 지원의 양과 질에 부침이 있어왔다.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북한 식량난 심화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됐지만,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을 계기로 대북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노무현 정부인 2007년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대북지원이 크게 위축됐고, 최근 북한 핵 개발 지속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등 영유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마저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분야별 특징)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초기에는 주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일반구호에 집중(일반구호 비중, 1995~1998년 평균 95.5%)됐으나,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일부 개선되면서 대북 농업복구 지원 비중(1999~2007년, 평균 54.3%)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보건의료 등 개발구호성 대북 인도적 지원 비중(2008~2016년, 평균 58.9%)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주체별 특징) 정부는 누적 약 1조 5,000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집행했고, 민간은 정부보다는 적지만 누적 8,972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다. 정부의 주요 지원 물품은 식량을 비롯해 비료, 의약품, 의료장비 등 다양하다. 한편, 106개

에 달하는 민간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회인프라(상하수도개선사업, 학교건립, 산림녹화 등), 농축산 지원(농자재 지원, 비료지원, 농업기술 지원) 등을 시행했다.

(종합 평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별 대북 정책에 따라 변화해 왔고, 식량 중심의 일반구호 방식에서 보건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평가 >

구분	주요내용
정부별	- 1995~2017년 : 총 3조 2,871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 1995년 북한 식량난 심화로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시작
분야별	-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되는 추세 · 일반구호 비중 : 1995~1998년 평균 95.5%→1999~2007년 평균 31.4% · 보건의료 비중 : 1995~1998년 평균 1.3%→2008~2016년 평균 58.9%
주체별	- 정부는 민간 대비 지원 금액에서 비교우위, 민간은 다양성에 비교우위 · 1995~2015년 간 누적 지원 금액 : 정부 약 1조 5,000억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 시사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통일 이전 북한 주민 마음 얻기에 초점을 맞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되 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점차 정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북한 임신부와 5세 미만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주민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료+영양지원 package)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지원에서 농업·보건의료·녹색사업 등으로 개발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감염병 관리 등 통일 지향적 사업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개요1)

○ 1995년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²⁾이 올해로 23주년을 맞았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명맥만 유지

- 대북 인도적 지원 배경 : 1995년 대홍수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에 쌀 15만 톤을 직접 지원하면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격화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수해와 가뭄으로 악화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
- 대북 인도적 지원 효과 :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식량 부족 완화,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
 - 2017년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약 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는 달리 대량 아사지는 발생치 않음
 - 이는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식량을 비롯한 비료 지원 등 다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속된 것에 기인
 - 또한 결핵 퇴치 등 보건의료 지원, 농촌 비닐하우스 개건 등의 사회 인프라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
-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 : 남북 간 상호 이해도 증진을 비롯해 바람직한 평화 통일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속될 필요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을 비롯해 소수이지만 주민과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남북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제로 작용
 - 또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될 필요
-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 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사실상 중단

○ 본 보고서에서는 1995년 이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를 정부별, 분야별, 주체별 특징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본 보고서는 이용화·이해정,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 『창립 30주년 기념총서 : 통일경제의 현재와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임.

2) 인도적 지원은 사람에 의해 야기된 위기 또는 자연에 의해 야기된 재난에 대한 단기 구호활동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장기적 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음. 박형중,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개념과 원칙”, 『KDI 북한경제리뷰』, p.3.

2.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특징

① 정부별 현황

○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까지 총 3조 2,871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었고, 개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부침이 있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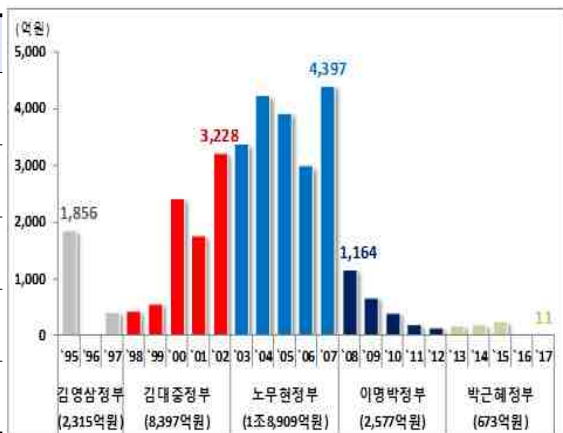
- 김영삼 정부 : 1995년 북한 식량난 심화로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시작
 - 북한의 긴급 식량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 인도적 지원을 실시
 - 하지만 1996년 강릉 잠수한 침투 사건을 계기로 대북 지원 확대에는 한계
- 김대중 정부 :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증가, 2002년 3,228억 원 기록
 - 1998년 3월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가 발표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모색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인도적 지원이 확대됐지만, 퍼주기 논란으로 의미 퇴색
- 노무현 정부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양적 확대를 통한 질적 변화 모색
 - 식량 지원 등 구호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농업구조개선 등 중장기적 지원 모색
 - 노무현 정부 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4,397억 원에 달함
- 이명박 정부 : 5.24조치와 이에 따른 민간차원 대북지원 크게 위축
 - 대북 인도적 지원 투명성을 강조하며 접근했으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축소
- 박근혜 정부 :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명맥만 유지

< 정부별 대북 인도적 지원 특징 >

정부	주요 특징
김영삼 정부	북한 수해로 긴급 지원
김대중 정부	민간 대북지원 활성화
노무현 정부	정부 및 민간 지원 확대
이명박 정부	5.24조치에 따른 지원 위축
박근혜 정부	정부 및 민간 지원 침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 정부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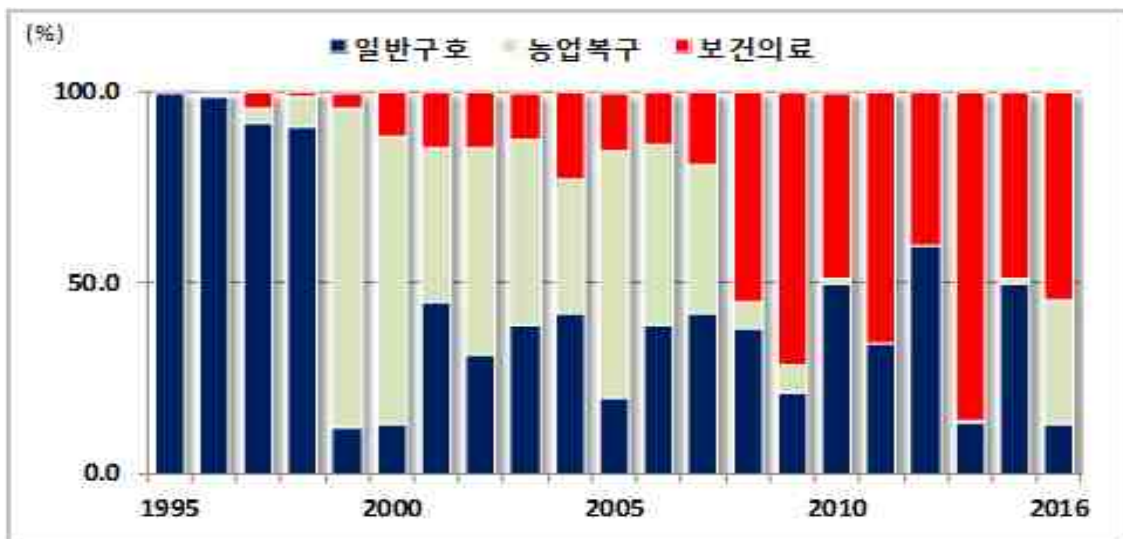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② 분야별 현황

○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되는 추세

- 대북 인도적 지원 초기에는 주로 긴급을 요하는 일반구호에 집중
 - 일반구호는 인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인도적 지원 상황 발생 시,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구호식량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임
 - 1995년 북한의 식량난 당시 일반구호의 비중은 100.0%였고, 고난의 행군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평균 95.5%에 달했음
 - 동기간 농업복구 및 보건의료의 지원 비중은 각각 평균 3.3%, 1.3%에 불과
- 2000년 이후 북한 식량난 개선으로 대북 농업복구 지원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
 - 2000년 들어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도 일반구호에서 농업복구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
 - 1999~2007년 사이 농업복구 분야의 평균 비중은 54.3%로 전체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절반 이상에 달한 반면, 일반구호 비중은 동기간 평균 31.4%로 축소
- 2008년 이후에는 보건의료 등 개발구호성 대북 인도적 지원 비중이 증가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개선 등에 따라 일시적인 긴급성 일반구호보다 장기적 차원의 보건의료(2008~2016년 평균 58.9%) 등의 개발구호 성격으로 전환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별 현황 >



자료 : 통계청 북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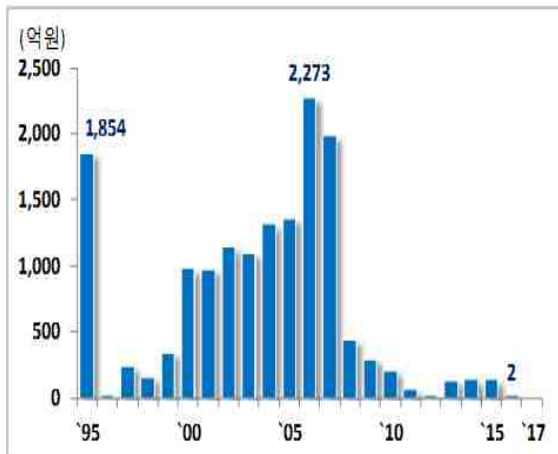
주 : 식량차관을 제외한 비중이며, 자료상 2016년까지 집계.

③ 주체별 현황

○ 정부차원에서는 그동안 약 1조 5,000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집행했고, 북한 내부 상황에 맞게 지원 방식을 다양화 함

- 1995년 북한 식량난으로 1,854억 원에 달하는 쌀 15만 톤을 지원하면서 시작
 -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직접지원을 비롯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 1995년에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15만 톤을 무상지원 했고, 2006년에는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2,273억 원을 지원한 것이 최대임
- 정부의 주요 지원 물품은 식량을 비롯해 비료, 의약품, 의료장비 등 다양함
 -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식량난 개선을 위해 쌀, 옥수수 등 식량 지원을 비롯해,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비료 등을 주로 지원
 -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 의료 지원 등 주로 방역 및 영양과 관련된 지원을 실시해 왔음
- 한편, 2000년 이후 지원된 대북 식량 차관은 총 8,728억 원에 달함
 -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지원
 - 하지만 최초 상환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차관 상환은 전무한 상황

<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 추이 >



자료 : 통계청 북한통계.
주 : 식량차관 제외.

< 정부의 대북 식량 차관 규모 >

(단위 : 억원)

연도	금액	지원내용
2000	1,057	쌀30만톤, 옥수수20만톤
2002	1,510	국내쌀40만톤
2003	1,510	국내쌀40만톤
2004	1,359	국내쌀10+외국쌀30만톤
2005	1,787	국내쌀40+외국쌀10만톤
2007	1,505	국내쌀15+외국쌀25만톤
합계	8,728	쌀240만톤, 옥수수20만톤

자료 : 통일부.
주 : 무상지원방식 제외.

○ 민간차원에서는 정부보다는 적지만 누적 8,972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고, 104개의 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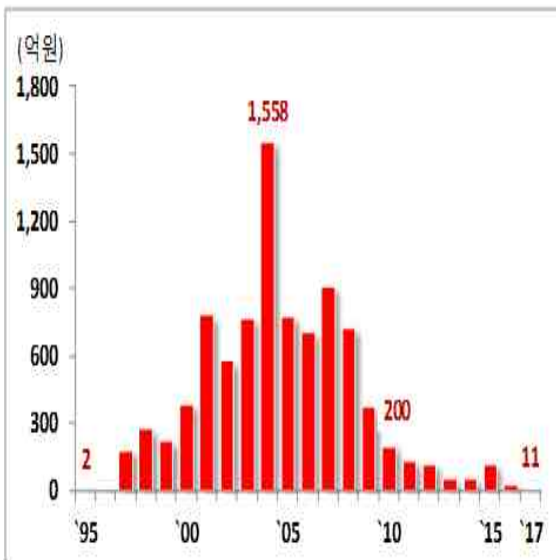
- 1997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확대됐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 이후 대폭 감소

- 1995년부터 본격화 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는 달리, 민간차원의 지원은 북한에 대한 국민적 대북 지원 공감대가 형성된 1997년부터 본격화
- 1995년에는 2억 원 상당의 담요 8천매를 지원했고, 2004년에는 밀가루, 농자재, 의약품, 감귤 등 1,558억 원 상당의 대북 지원을 실시한 바 있음
-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조치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축소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11억 원 규모에 불과

-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 민간지원 단체는 총 106개로, 보건의료를 비롯해 우선복지, 사회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결핵약 등 의약품 지원, 의료 기자재 지원, 병원 건립 및 개선, 의약품 및 의료 기자재 생산 공장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해 왔음
- 특히 정부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회인프라(상하수도개선사업, 학교건립 및 개선, 산림녹화 등), 농축산 지원(농자재 지원, 비료지원, 농업기술 지원) 등을 시행

<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 추이 >



자료 : 통계청 북한통계.
주 : 대한적십자사 포함.

< 민간의 대북 지원 사업 현황 >

구분	단체수	주요 지원 내용
긴급구호 일반구호	31개	식량 및 생필품 지원 수해복구 지원
농축산	24개	종자 및 비료 지원 농기자재 지원 등
보건의료	25개	결핵약, 영양제 지원 병원 현대화 지원 등
우선복지	27개	영유아, 임산부 지원 빵공장설립 지원 등
사회 인프라	12개	조립사업, 태양광 지원 농촌형 주택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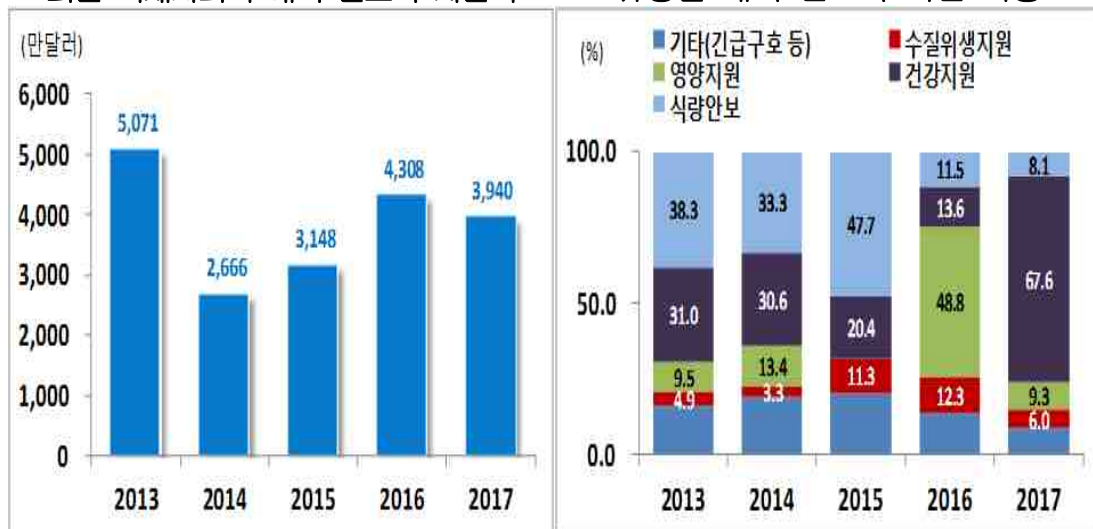
자료 : 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 참조.
주1) 통일부 허가 단체는 총 106개임.
2) 단체수는 중복 포함.

< 보론.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 >

○ 2013~2017년 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억 9,000만 달러 수준

-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일정 수준을 유지
 - 연도별 규모 : 2013년 약 5,000만 달러에서 2014년 약 2,700만 달러로 줄었다가, 2016년 약 4,300만 달러, 2017년 약 3,940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남
 - 주요 지원국 : 스위스, 스웨덴,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17개 국가
 - 최대 지원국 : 2017년 기준 스위스가 약 7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러시아(300만 달러), 스웨덴(204만 달러), 캐나다(150만 달러) 순임
 - 한편 2013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전혀 없었던 미국의 경우, 2017년 UNICEF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특징
-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 유형은 건강지원(산모, 영유아 등), 영양지원, 긴급 식량지원, 수질위생 지원 등으로 구분
 - 2017년 기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건강지원(67.6%)이며, 다음으로 영양지원(9.3%), 식량안보(8.1%) 순임
 - 그 밖에 수질위생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불특정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구호도 실시 중임

<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 > < 유형별 대북 인도적 지원 비중 >



자료 : UNOCHA(Financial Tracking Database), 2018.2.2.

④ 종합 평가

- **평가결과,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별 대북 정책에 따라 변화해 왔고, 식량 중심의 일반구호 방식에서 보건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
 - **정부별** :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까지 개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부침이 있어 왔음
 -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까지 총 3조 2,871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행
 - 대북 인도적 지원 최대 활성화기는 노무현 정부임(1조 8,909억 원)
 - **분야별** :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단기적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 등 북한 개발지원 방식으로 확대되는 추세
 - 대북 인도적 지원 초기에는 주로 긴급을 요하는 식량지원 등 일반구호 중심에 집중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개선에 따라 일시적인 긴급성 일반구호보다 장기적 차원의 보건의료(2008~2016년 평균 58.9%) 등의 개발구호 성격으로 전환
 - **주체별** : 정부는 민간 대비 대북 인도적 지원 금액은 우위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정부가 집행하기 어려운 사회인프라 사업 등을 실시
 - 정부차원에서는 그동안 약 1조 5,000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집행, 민간은 정부보다는 적지만 약 9,000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
 - 한편 정부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회인프라(상하수도개선사업, 학교건립 및 개선, 산림녹화 등) 사업은 민간이 중심으로 실시해 옴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평가 >

구분	주요내용
정부별	- 1995~2017년 : 총 3조 2,871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 1995년 북한 식량난 심화로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 시작
분야별	-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되는 추세 · 일반구호 비중 : 1995~1998년 평균 95.5%→1999~2007년 평균 31.4% · 보건의료 비중 : 1995~1998년 평균 1.3%→2008~2016년 평균 58.9%
주체별	- 정부는 민간 대비 지원 금액에서 비교우위, 민간은 다양성에 비교우위 · 1995~2015년 간 누적 지원 금액 : 정부 약 1조 5,000억원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4. 시사점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통일 이전 북한 주민 마음 얻기에 초점을 맞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되, 대북 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첫째,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점차 정부 차원의 노력을 확대
 -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식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점차 정부 차원의 노력을 확대
 - 둘째, 북한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추진
 -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³⁾ 해소를 위한 ‘북한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료+영양지원 package)을 추진
 - 셋째, 단순한 지원에서 농업·보건의료·녹색사업 등으로 개발협력을 구체화
 - 구호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 개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상하수도 및 위생관련 생활 인프라 구축 등 개발협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필요
 - 특히,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감염병 관리 등 통일 지향적 사업은 우선 추진
 - 넷째,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안도 모색
 - 국제기구의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 지원 방안도 고려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3) 통계청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남북간 기대수명 격차는 12년이며,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남한의 7.6배, 성인 남성 평균 신장 격차도 15cm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필요.

< 참고 1.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 1995~2017년까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누계 총액은 3조 2,871억 원임

(단위 : 억원)

구분		정부차원				정부 소계	민간 차원 (무상)	총계
		무상지원			식량 차관			
		직접 지원	민간단체 경유	국제기구 경유				
김영삼 정부	1995	1,854	-	-	-	1,854	2	1,856
	1996	-	-	24	-	24	12	37
	1997	-	-	240	-	240	182	422
김대중 정부	1998	-	-	154	-	154	275	429
	1999	339	-	-	-	339	223	562
	2000	944	34	-	1,057	2,034	386	2,421
	2001	684	63	229	-	976	782	1,757
	2002	832	65	243	1,510	2,650	578	3,228
노무현 정부	2003	811	81	205	1,510	2,607	766	3,373
	2004	949	102	262	1,359	2,673	1,558	4,231
	2005	1,221	120	19	1,787	3,147	780	3,926
	2006	2,000	133	139	-	2,273	709	2,982
	2007	1,432	216	335	1,505	3,488	909	4,397
이명박 정부	2008	-	241	197	-	438	726	1,164
	2009	-	77	217	-	294	377	671
	2010	183	21	-	-	204	201	405
	2011	-	-	65	-	65	131	196
	2012	-	-	23	-	23	118	141
박근혜 정부	2013	-	-	133	-	133	51	183
	2014	-	-	141	-	141	54	195
	2015	-	23	117	-	140	114	254
	2016	-	1	1	-	2	28	30
	2017	-	-	-	-	-	11	11
총계		11,249	1,177	2,744	8,728	23,898	8,972	32,871

자료 : 통일부.

< 참고 2.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세 현황 >

연도	규모	지원방식	주요 지원 내용
1995	23,200만 달러(1,854억원)	직접지원	쌀 15만톤
1996	305만 달러(24억원)	UN경유	분유, 기상자재 등
1997	2,667만 달러(240억원)	UN경유	옥수수, 분유, 의료 등
1998	1,100만 달러(154억원)	UN경유	옥수수, 밀가루
1999	2,825만 달러(339억원)	직접지원	비료 11.5만톤
2000	8,139만 달러(978억원)	직접지원	비료 30만톤
2001	7,522만 달러(975억원)	직접지원/WFP/WHO	내의, 옥수수, 비료 등
2002	8,915만 달러(1,140억원)	직접지원/WFP/WHO	비료, 말라리아 방역
2003	9,377만 달러(1,097억원)	직접지원/WFP/UNICEF	취약계층 지원 등
2004	11,541만달러(1,313억원)	직접지원/WFP/WHO	의약품, 비료 등
2005	13,588만달러(1,360억원)	직접지원/WFP/UNICEF	수해응급구호 등
2006	22,740만달러(2,273억원)	직접지원/WFP/UNICEF	영유아 지원 등
2007	20,893만달러(1,983억원)	직접지원/WHO/WFP 등	구제역, 식량지원 등
2008	3,996만달러(438억원)	WHO/IVI/UNICEF	영유아, 의료지원 등
2009	2,420만달러(294억원)	직접지원/WHO/WFP 등	의료인력교육 등
2010	1,780만달러(204억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신종플루, 수해지원
2011	565만달러(65억원)	UNICEF	영유아, 의약품 지원
2012	210만달러(23억원)	IVI	백신 및 의료교육
2013	1,209만달러(133억원)	UNICEF/WHO	보건 및 영양지원
2014	1,330만달러(141억원)	WHO/WFP	보건 및 영양지원
2015	1,220만달러(140억원)	UNICEF/WFP 등	보건, 의료인력 지원
2016	20만달러(2억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의료장비 등
2017	-	-	-
합계	145,566만달러(1조 5,171억원)	-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식량차관 제외.

< 참고 3.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세 현황 >

연도	규모	지원방식	주요 지원 내용
1995	25만달러(2억원)	국적경유	담요 8천매
1996	155만달러(12억원)	국적경유	밀가루, 분유, 식용유
1997	2,056만달러(182억원)	국적/적십자 경유	옥수수, 감자, 리면 등
1998	2,085만달러(275억원)	적십자 경유	약품, 분유, 젓소 등
1999	1,863만달러(223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옥수수, 약품, 비료 등
2000	3,238만달러(387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감귤, 의류, 설탕 등
2001	6,017만달러(782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옥수수, 설탕, 분유 등
2002	4,577만달러(576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의류, 의료장비 등
2003	6,386만달러(766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의류, 생활용품 등
2004	13,250만달러(1,558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농자재, 의약품 등
2005	7,666만달러(779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밀가루, 의약품 등
2006	7,088만달러(709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밀가루, 수해복구 등
2007	9,568만달러(909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의료소모품, 감귤 등
2008	6,460만달러(725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의류, 양묘장 자재 등
2009	2,858만달러(377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식량, 온실자재 등
2010	1,748만달러(200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연탄, 말라리아 방역
2011	1,173만달러(131억원)	독자창구	분유, 두유, 의약품 등
2012	1,032만달러(118억원)	독자창구	밀가루, 수해지원 등
2013	453만달러(51억원)	독자창구	영양빵재료 등
2014	506만달러(54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영양식, 농자재 등
2015	1,002만달러(114억원)	적십자/독자 창구	진료소자재, 묘목 등
2016	236만달러(28억원)	독자창구	영양빵재료, 의약품 등
2017	100만달러(11억원)	독자창구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합계	79,543만달러(8,972억원)	-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을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